

## 주요국의 지역개발 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정은 전임연구원(jelee@kdb.co.kr)

### I. 배경

### III. 요약 및 시사점

### II. 주요국의 지역개발 지원정책 현황

경제성장을 목표로 산업육성 및 경제발전에 유리한 지역 위주의 개발정책을 시행하였던 선진국들은 지역쇠퇴현상의 부작용을 겪으며 낙후지역의 성장과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지역간 격차 해소가 국가적 과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의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3개국의 지역개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은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RW)'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주기별 취약지역을 선정 후 지원지역내 기업·산업, 인프라 투자, 지자체의 개발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 이탈리아의 부흥을 위한 "PIANO SUD 2030"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자본 육성, 인프라 개발, 녹색전환, 혁신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중점과제로 세부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일본은 '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을 도입해 지역격차 해소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창생정책과 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지방창생정책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주요국은 주기별 정책평가 및 목표 재설정, 지원프로젝트 효과 분석과 같은 피드백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래신기술 및 그린전환 지원 등 시대변화에 발맞춰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해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둔다는 특징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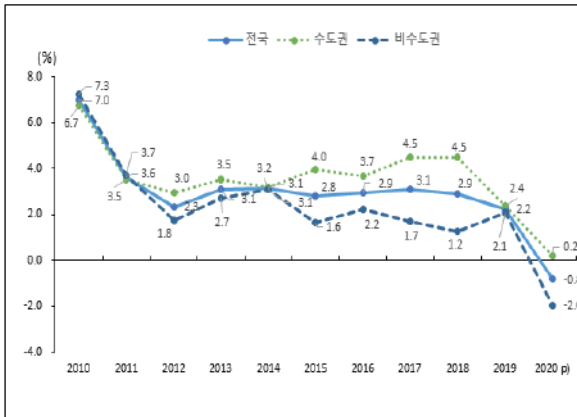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 I. 배경

### □ 지역개발을 통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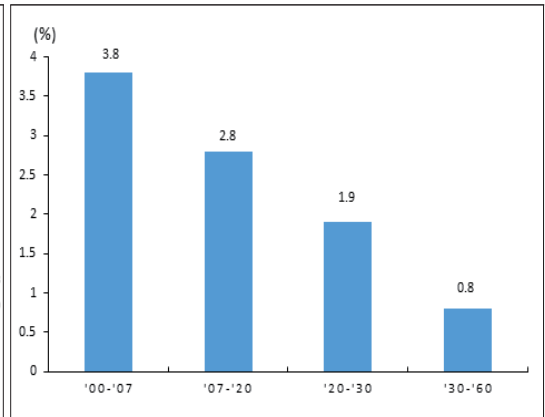
-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하회
  - 특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역격차 해소는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장의 전제조건
-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재도약의 선결조건으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포함

<그림 1> 지역별 GRDP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그림 2> 한국 1인당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 OECD(2021)

### □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 지원정책을 추진

- 본고에서는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의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 3개국의 지역개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II. 주요국의 지역개발 지원정책 현황

### 1. 독일

#### □ 동서 지역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EU 및 국가차원의 정책이 존재

- '90년 통일 이후 구동독과 구서독지역간 소득격차, 구서독지역으로의 인력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지역개발 지원정책은 구동독지역 개발에 집중
  - '95년 동독의 경제력은 서독의 43% 수준이었으나, '18년 서독의 75%까지 상승하여 EU회원국의 평균치에 도달<sup>1)</sup>
- EU차원의 지역정책과 독일정부차원의 지역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 EU차원의 지역정책은 유럽구조투자기금(ESIF: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을 활용
  - 연방정부 및 주정부<sup>2)</sup>는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이하 GRW<sup>3)</sup>)'에 근거하여 지역개발 지원기준을 마련

#### <참고 1>

#### 유럽구조투자기금(ESIF) 개요

- 유럽구조투자기금은 낙후지역 성장 및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한 EU차원의 기금으로 지역구분에 따라 차등지원
-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결속기금(Cohesion Fund) 등으로 구성
  - EU 회원국의 예산을 기반으로 자금이 조성되며, 지역별 낙후도를 토대로 경제·사회 활성화 목적의 자금을 지원
- '14~'20년 실행기간 동안 유럽구조투자기금은 독일에 290억유로를 할당
  - 원칙적으로 모든 주는 구조기금 수혜대상이며, 동독지역 고용에 특히 기여

1)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2019), "Annual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on the Status of German Unity 2019"

2) 독일 행정체계는 연방(Bund)-주(Land)-연합시군(Kreis)-게마인데(Gemeinde, 기초자치단체)로 구성

3) Gemeinschaftsaufgabe fü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Joint Federal/Länder Task for the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s)

□ GRW는 취약지역내 ①기업의 시설투자, ②교통·상업 인프라 개발, ③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경쟁력있는 성장 도모

- GRW는 취약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장기적 성장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69년부터 시행
  - 독일헌법(German Basic Law)에 균등한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명시
  - '69년 시작 이래 '70년대에는 교외지역 산업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90년대 이후로는 동독지역 경제개발에 주력

<참고 2>

GRW 지원대상지역 평가기준

□ GRW에 근거하여 지원주기별로 각 지역의 낙후도를 평가 및 분류하며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

- 낙후도에 따라 4개의 지원대상 지역(A, B, C, D)과 지원불필요 지역으로 분류4)
  - 현재 '22~'27년 계획기간중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C, D의 지역 유형이 존재
- ①지역생산성(37.5%), ②평균실업률(37.5%), ③고용가능인구 전망(17.5%), ④기반 시설지표(7.5%)을 통해 낙후도를 평가5)
  - 지역등급 및 기업규모별로 사업비대비 최대지원비율6)에 차등

- 취약지역 내의 ①무역 및 산업 투자, ②상업인프라(local commerce-related infrastructure), ③협력사업에 저리대출 및 보조금 지급
  - 기업의 신규 시설투자와 시설 인수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R&D, 직원교육, 전문인력 채용에도 자금지원
  - 상업인프라 부문에서는 관광시설개발('15~'19년 지원비중 33%), 산업·상업 부지개발(20%), 교통인프라개발(12%), 교육시설(11%)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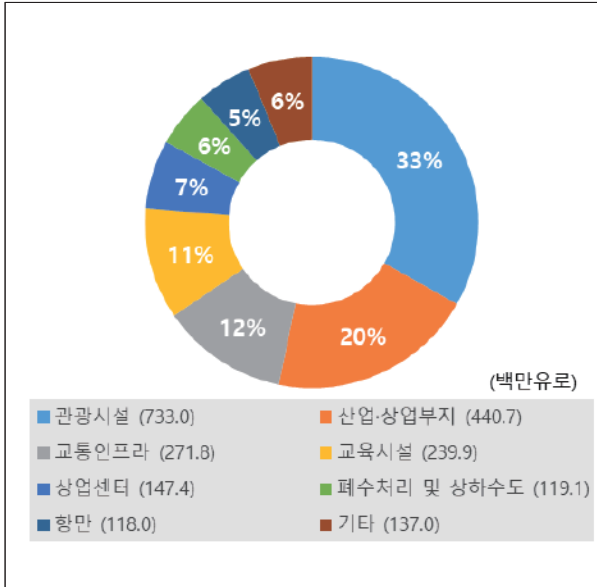
4) 이원섭·박양호(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5) 지역생산성은 '18년 취업자(Erwerbstätigen) 1인당 GDP을 의미하며, 평균실업률 대상기간은 '17~'19년, 고용가능인구 전망 대상기간은 '17~'40년임

6) 1인당 GDP가 EU27 평균을 초과하지 않는 C지역: 소기업 35% 중견기업 25% 대기업 15%  
 1인당 GDP가 EU27 평균을 초과하는 C지역 : 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0%  
 D지역 : 소기업 20%, 중견기업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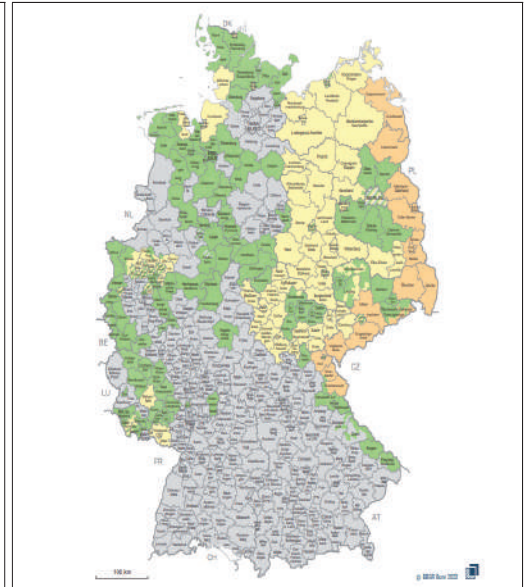
- 지자체의 지역개발 프로젝트, 기업과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강화목적의 혁신 클러스터(innovations cluster) 조성 등의 협력사업 지원

<그림 3> GRW 상업인프라 지원비중



주 : '15년~'19년 기준  
 자료 : 독일 BMWK 홈페이지

<그림 4> '22년~'27년 기준 지원지역



주 : C지역(노란색), D지역(초록색)을 의미  
 자료 : 독일 BMWK 홈페이지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 공동분담 및 주정부의 관리하에 GRW를 운영하며 사후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프로젝트 효과를 분석**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원을 절반씩 분담하며, 주정부(Lander)가 실질적 수행주체
  - 지원프로젝트 선정, 수혜자 앞 승인통지 및 조건준수 모니터링 등의 구체적 시행은 주정부의 책임하에 진행
- 자금지원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지원프로젝트의 경제효과를 평가
  - 연방경제수출통제국(BAFA)7)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프로젝트 완료 5년 후의 고용 및 소득 효과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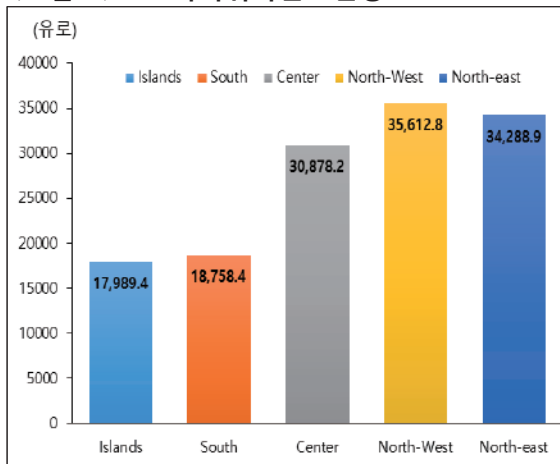
7)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산하 기관(agency)으로 대외무역, 경제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 감독 관련 업무를 수행

## 2. 이탈리아

### □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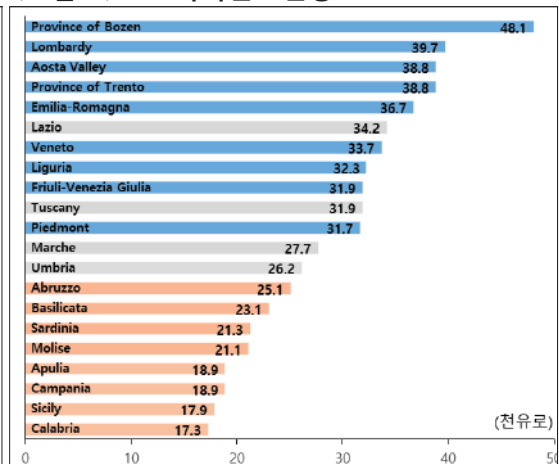
- 이탈리아 남부지역(Mezzogiorno)<sup>8)</sup>과 북부지역 간 지역격차는 과거부터 지속
  - 전통적으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업 및 산업 활동이 활발했으며, 남부지역은 농업을 중심으로 발전
  - 산업화와 '5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산업 발전은 북부 특정주에 집중되었고, 남부지역의 인력이 북부지역으로 이동하며 지역격차 심화
- 헌법에 근간을 두어 지역개발 지원정책을 추진
  - 헌법상 지방정부<sup>9)</sup>의 지방자치권을 인정하며, 지역간 경제사회적 불평등 제거 및 사회결속의 중요성을 강조<sup>10)</sup>
  - '01년 헌법개정을 통해 각 지방에서 징수된 국세들을 공유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지역간 재정조정을 실시

<그림 5> 지역위치별 1인당 GDP



자료 : statista ('19년)

<그림 6> 지역별 1인당 GDP<sup>11)</sup>



주 : 남부(주황색), 중부(회색), 북부(파란색)

자료 : statista ('19년)

- 8) 아부르초, 바실리타카, 칼라브리아, 캄파니아, 몰리제, 풀리아, 사르데냐, 시칠리아 등 8개주로 구성
- 9) 주(Regione) - 도(Provincia) 및 광역시(Citta Metropolitana) - 시(Commune)의 단위로 구성
- 10) 이탈리아 지방정부는 지방자치권(5조), 자치입법권(117조) 및 자치재정권(119조)을 헌법으로 보장받으며, 119조 내 '지역간 조세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평형기금을 설치·운영한다'는 내용 명시

□ 이탈리아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 이탈리아의 부흥을 위해 “PIANO SUD 2030(Plan for the South 2030)”정책 프로그램을 운영

- '20년 2월 이탈리아 정부는 '30년까지 다섯 가지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남부 지역 개발 지원정책을 발표
  - EU의 결속정책 및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맞추어 정책수립
  - ①인적자본 육성, ②인프라 개발, ③친환경 전환, ④혁신산업 육성 및 ⑤해외 진출 지원을 5대 정책과제로 선정
- 국토통합청(Territorial Cohesion Agency)<sup>12)</sup>에서 동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정부 재정 외에 유럽구조투자기금과 개발결속기금(FSC<sup>13)</sup>)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
  - 개발결속기금은 유럽구조투자기금과 함께 경제 및 사회 불균형 제거를 목적으로 하며 남부지역에 80%, 중북부지역에 20%를 할당

□ 동 프로그램은 남부지역에 대한 그린딜 추진,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산업 재편과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표

- 에너지 효율성과 순환경제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좌초산업에 대한 공정전환 지원
  - ‘Cantiere Taranto’ 계획을 통해 환경·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Taranto지역의 산업전환과 물류인프라 확대를 추진
    - EU의 공정전환기금<sup>14)</sup>을 활용하여 ILVA의 Taranto지역 제철소<sup>15)</sup> 저탄소 전환을 지원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연구기관간 기술이전 지원, 기술스타트업 지원 및 R&D 세액공제 등을 실시

11) Province of Bozen, Province of Trento는 북부 Trentino-Alto Adige주의 도이며, 이외에는 주기준

12) 국토통합청은 이탈리아 수상(President of the Council of Ministers) 산하기관(public agency)으로 공공행정 합리화 목적을 위해 설립

13) Fondo Sviluppo e Coesione(Development and Cohesion Fund)

14)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좌초산업의 공정전환 지원 목적의 기금으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에 포함

15) ILVA(현 Acciaierie d'Italia)는 Taranto지역에 유럽 최대의 단일 제철소를 보유한 철강회사로 환경오염 이슈로 국가에 압류된 후, 생산량 규모 세계2위 철강업체인 ArcelorMittal에 인수되어 ArcelorMittal이 지분 62%, Invitalia가 지분 38%를 보유

- 연구원 고용, 연구 계약 및 특허 등 분야에 대한 R&D 세금 공제<sup>16)</sup>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고용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및 중소기업 대상 자본 투자 등의 지원 확대

〈표 1〉 SUD 2030의 정책과제 및 세부정책

5대 정책과제	세부정책
① 인적자본 육성 (A youth oriented Southern Ita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가치사슬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빈곤퇴치 강화</li> <li>- 남부대학 비과세 확대</li> <li>- 연구원 유치: 2년~8년 경력의 박사대상</li> </ul> </li> <li>■ 학교 건물 개선</li> </ul>
② 인프라 개발 (A connected and inclusive Southern Ita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네트워크 강화</li> <li>■ 물류인프라 강화</li> <li>■ 지방정부 대상 사회기반시설자금 지원</li> </ul>
③ 친환경 전환 (A go-green Southern Ita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부이탈리아 그린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인프라 프로젝트 및 순환경제 지원</li> <li>- 에너지 효율화사업 지원</li> <li>- 좌초산업의 공정전환 지원</li> </ul> </li> </ul>
④ 혁신산업 육성 (An innovation-frontier Southern Ita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훈련기관 지원</li> <li>- 기술 스타트업 지원</li> <li>- 기술이전 지원</li> <li>- R&amp;D 세금공제</li> </ul> </li> </ul>
⑤ 해외 진출 지원 (A southern Italy open to the world in the Mediterran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가치사슬 내 수출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등</li> </ul> </li> <li>■ 경제특구(SEZ) 지원<sup>17)</sup></li> </ul>

자료 : Minister for Southern Italy and Territorial Cohesion(2020), "PIANO SUD 2030 SVILUPPO E COESIONE PER L'ITALIA"

16) 기초R&D: 비용의 100%, 산업R&D: 비용의 50%, 응용R&D: 비용의 25% 목표

17) 세금 공제 강화, 행정 간소화, 물류 인프라 대상 자금 지원, 에너지 비용 감축 지원 등의 혜택 제공

### 3. 일본

#### □ 과거부터 실시되어 온 지역개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론이 제기되는 등 지역간 격차가 심화

-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급감으로 지역발전이 정책적 과제로 부상
  - '00년대 장기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의 악화로 인구의 대도시 집중 및 지방소멸 현상이 심화
  - '14.5월 발표된 '마쓰다 보고서'18)는 지방소멸 문제를 부각시켜 지역발전이 국가적 중요 정책 아젠다로 설정되는 계기로 작용
- 아베정부는 '14.11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19)'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지역개발 지원정책을 추진
  - 법률내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이하 지방창생정책)의 이념과 국가책무, 지방창생본부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

#### □ 중앙정부는 국가 전반의 지역개발 정책체계인 지방창생정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지방창생정책을 추진

- '15~'19년중 실시된 제1기 지방창생정책은 인구감소 문제 극복 등 비전을 설정하고 4대 기본목표 하에서 세부 시책들을 선정하여 추진
  -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지원(국가공무원의 지역과전 등), 재정지원(지방창생교부금 제도20) 등), 정보지원(지역경제분석시스템) 등 지원제도를 마련
  - 빅데이터 시스템에 기초해 지역의 특성 및 지역과제를 추출하며, 각 지방정부는 지역과제에 근거한 지방관 종합전략을 수립

18) '14.5월 일본이 현재 추세대로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지속시 '40년까지 896개 지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

19) 창생(創生)은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로 제정목적(제1조)은 ①일본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인구감소에 대응, ②과도한 인구집중 시정을 통한 각 지역에 살기 좋은 환경 확보, ③향후 활기찬 일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함임

20) 지자체가 제안한 지방창생 관련 사업에 대해 공모로 선정 후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

〈표 2〉 제1기 지방창생전략의 정책체계

장기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 문제의 극복 : '60년 1억명 인구 확보, 출산율 1.8명 실현</li> <li>■ 성장력 확보 : '50년 실질 GDP 성장률 1.5~2.0% 유지</li> </ul>	
제1기 종합전략	기본목표	주요 시책
	① 지방에 안정적인 고용 창출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 인재유입, 지방인재 육성, 지역 고용대책
	② 지방에 새로운 인구 유입 촉진	-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와 지방채용·일자리 확대 - 지방대학 활성화
	③ 청년세대 결혼, 출산, 육아 지원	- 결혼·출산·육아 지원 - 일·가정 양립 실현(근로방식의 변화)
	④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안심생활 유지와 지역간 연계 촉진)	- 지방도시에 경제·생활권 형성 - 대도시권의 안심 생활 기반 확보

자료 : 국토연구원(2020), "인구감소 시대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 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2020~2040)", 국토이슈리포트 제22호

- 현재 추진중인 제2기 지방창생정책('20~'24년)은 1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현실적 보완을 추진
  - 인구감소 및 일극집중현상이 미해소과제로 평가되어 제1기 정책의 4대 기본목표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목표 추가
    - 청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의 다양한 인재활용과 미래기술 등의 새로운 시대흐름을 동력으로 하는 횡단면 목표를 지정
  - 지방으로 사람·자금의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인구<sup>21)</sup>의 확대 도모, 지역생산성 및 소득 창출 역량 강화 추진 등이 주요 특징
    - 관계인구는 UIJ<sup>22)</sup> 통한 창업 및 취업, 기업 인재육성사업 등에 의해 유치

21) 특정한 지역과 연(관계)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구

22) U턴(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한 후 다시 지방으로 돌아옴), I턴(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 J턴(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한 후 지방 근교의 중소도시로 이주)을 의미하며, 이주지원금 및 창업지원금 등을 통해 동경권에서 UIJ<sup>22)</sup>하는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

**<표 3> 제2기 지방창생전략의 정책체계**

장기비전	■ 미래에도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	
제2기 종합전략	기본목표	주요 시책
	① 수입이 많은 지역을 만들고 안정적 고용 창출	- 지역 자원·산업을 활용해 지역경쟁력 강화 - 전문 인재의 확보 및 육성 - 일하기 좋은 취업환경 조성
	② 지방과 연계 강화와 지방으로의 인구흐름 생성	- 청년 교육 및 취업 지원 -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 지방으로 자금의 흐름 창출·확대
	③ 결혼·출산·육아 지원	- 결혼·출산·육아 지원 - 일과 육아 양립
	④ 사람이 모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생성	- 생활의 질 향상 위한 마을의 기능 수행 (매력적인 지방도시 생활권·도시 형성 등) - 지역자원을 활용한 개성 있는 지역 형성 - 안심 생활이 가능한 마을 형성(의료·복지 등 확보)

자료 : 국토연구원(2020), "인구감소 시대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 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2020~2040)", 국토이슈리포트 제22호

**□ 중앙정부의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이하 지방창생본부)'가 동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앞 세제혜택 제공 및 지자체의 지방재정 지원**

- 최고 의사결정기구(컨트론타워)로서 총리를 본부장으로, 모든 국무대신을 본부원으로 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추진본부'를 내각에 설치
  - 국무대신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마을·사람·일자리 창생회의')를 설치하여 지역창생 관련 조사·심의 실시
-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대체로 중앙정부의 추진체계와 유사
  - 지자체의 장과 간부로 구성된 추진본부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기구 등을 보유

-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창생교부금 등을 활용해 내각이 지방창생사업의 시책별 예산지원
  -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시책별 예산 지원에 사용되며, 지방창생교부금을 통해 지자체앞 재정지원
  - 세부시책으로는 문부과학성의 지역혁신생태계 형성 및 지역·학교 연계체제 구축, 내각부의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국토교통성의 대중교통 개선 등이 존재

**<표 4> '21년 정부시책별 지방창생예산** (단위 : 억엔)

창생종합전략에 입각한 정부 시책		지방창생예산	
기본 목표	수입이 많은 지역을 만들고 안정적 고용 창출	1,655	9,916
	지방과 연계 강화와 지방으로의 인구흐름 생성	414	
	결혼·출산·육아의 지원	3,714	
	사람이 모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생성	4,133	
횡단적 목표	다양한 인재의 활약	197	1,441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활용	1,244	
정책 패키지 전반	지방창생추진교부금	1,000	1,000
합계		12,357	

자료 : 류영아(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국회 입법조사처

### Ⅲ. 요약 및 시사점

- **주요국은 장기적 관점으로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한 후 결과분석 및 지원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운영**
  - 독일의 GRW는 주기별 지원지역 및 지원수준을 선정하고 지원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미달성 목표 검증 및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
  -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은 정책목표별 성과평가를 통해 현실적 보완을 추진
    -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여성, 외국인와 같은 다양한 인재 활용과 관계인구 등 인구개념의 확장을 제시
- **신기술 활용, 탄소중립 확대 등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지역개발 지원정책 추진**
  -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 지역기업의 그린전환과 디지털전환 지원을 명시
    - GRW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목적의 R&D 및 인력개발을 지원
    - 이탈리아의 'PIANO SUD 2030'는 좌초산업의 공정전환,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남부이탈리아 그린딜 추진
  - 일본정부는 지역경제 빅데이터 자료를 지방정부에 제공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체계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
- **지역개발을 위해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한 특성**
  - 독일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간 지식 공유와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일본도 지역혁신생태계 형성 시책을 마련
  - 이탈리아는 R&D 세액공제와 기술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창업 촉진, 신규 기업 유치와 고용 확대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추진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 국토연구원(2020), “인구감소 시대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 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2020~2040)”, 국토이슈리포트 제22호
- 국회도서관(2017),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김동훈(2017), “이탈리아 헌법과 헌법재판제도”, 2017년 헌법논총 vol 28, 헌법재판소
- 김용웅·한상욱(2011),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11년 전략과제 제1차 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
- 김은경(2009), “유럽의 지역경제정책: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의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홍종외(2005),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류영아(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NARS 입법·정책 제108호, 국회입법조사처
- 박진경(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_\_\_\_\_ (2020), “일본 제2기 지방창생, 도쿄권으로의 일극집중 시정의 의미”,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10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연미외(2020),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연구”, 국토연구원
- 안영진(2007),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I: 성립과정과 조직체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0권 제4호 2007,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원종학 등(2018), “지방발전을 위한 조세제도와 지역발전사업: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동식(2013), “독일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성재·한국환(2020),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유형별 발전전략 연구”, 기획연구 2020-01, 전북연구원
- 이원섭·박양호(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 이종서(2020), “브렉시트(Brexit) 이후 EU 결속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통합

- 유럽연구 제11권 3집,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이지평·류상운·김혜경(2017),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동향과 Society5.0”, LG경제  
연구원  
임정성(2017), “쇠락의 길로 접어든 유럽 철강산업, 회생 가능성 있나?”, POSRI 이슈  
리포트  
정윤선·윤기확(2019), “일본 지방창생정책과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ISSUE PAPER 2019-460, 산업연구원  
정형곤(2020),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_\_\_\_\_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주밀라노총영사관(2021), “2021 이탈리아 진출 비즈니스 가이드”  
하혜영·김유정(2016), “일본 지방창생전략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  
1220호,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자치학회(2010), “EU 지역정부 사례 연구”  
황명석 등(2020), “2020년 2/4분기 국외 파견 공무원 정책보고서”, 행정안전부 행정한류  
담당관실

## [영문자료]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2019), “Annual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on the Status of German Unity 2019”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2021), “Framework for  
the Coordination of the Joint Federal/Länder Task for the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s (GRW) as of 1 January 2022”  
\_\_\_\_\_, <http://bmwk.de>  
Minister for Southern Italy and Territorial Cohesion(2020), “PIANO SUD 2030  
SVILUPPO E COESIONE PER L'ITALIA”  
\_\_\_\_\_(2021), “GOVERNMENT ACTION  
TAKEN REPORT”  
\_\_\_\_\_, <http://ministroperilsud.gov.it>  
OECD(2019), “Regional Outlook 2019: Leveraging Megatrends for Cities and  
Rural Areas”

\_\_\_\_\_(2021), “The Long Game : Fiscal Outlook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al Reform”

The Territorial Cohesion Agency, <http://agenziacoesione.gov.it>